

2026.2.23.(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차도순 국장(을지원국) / 김대경 보좌관(민병덕 의원실) 02-784-9540

## 홈플러스 회생 연장·유암코 제3자 관리인 선임 촉구 기자회견

- 민병덕 위원장 “회생제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서울회생법원의 책임 있는 결단 필요”

**2026년 2월 23일 (월) 15: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 연장 및 유암코 제3자 관리인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회생법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해 권향엽·정진욱·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MBK가 2025년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점포 축소와 폐점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 126개였던 점포를 2027년까지 102개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제시된 상태다. 이미 다수 점포가 문을 닫았고 추가 폐점도 예정돼 있다.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0만 홈플러스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사회의 미래가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생은 기업 하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충분한 정상화 대안 없이 청산을 선택하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명의 노동조합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2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응축된 상징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회생 절차 즉각 연장 ▲제3자 관리인으로 유암코 선임을 서울회생법원에 요구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기업회생 신청 1년이 지났지만 점포 폐점이 이어지고 있어 정상화로 볼 수 없다” 며 “약 30만 명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회생제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인 만큼 회생 절차를 연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회생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MBK 김병주 회장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 10만 홈플러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절차를 연장하고 제3자 관리인으로 유암코를 선임하라

오늘 우리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10만 홈플러스 노동자의 생존권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현실 앞에 서 있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10만 노동자들은 전국의 매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일자리는 곧 가정의 생계이며,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그러나 지금 이 거대한 삶의 터전이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회생은 기업 하나를 위한 절차가 아니다.

회생은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충분한 자금 조달 방안과 실질적 정상화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청산을 선택하는 것은 10만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1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21일째 노숙 무기한 단식 중이며, 이미 장기간 반복된 단식으로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다.

그러나 이 단식은 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10만 노동자의 절박함이 응축된 상징이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규다. 노동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호소해야만 하는 현실이야말로 지금 사태의 비정함을 보여준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다. 서울회생법원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희생 절차를 즉각 연장하라.**

충분한 시간과 조건을 확보하여 홈플러스의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졸속 청산은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제3자 관리인으로 유암코 선임을 결정하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 이는 1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은 단순한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 회생제도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투기적 자본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노동자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라는 상식적인 결정을 요구한다. 10만 노동자의 삶은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 뒤에는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며, 부모가 있고, 지역의 이웃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두 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건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청산’이라는 가장 쉬운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1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23일(월)**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